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를 통해 발전시켜 온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검열·허가·탄압·금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봉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법적 괴롭힘을 가하고, 집회를 사전금지, 강제해산하며,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마저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을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공공정보를 비공개, 삭제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 기관과 공영방송의 주요 인사들을 강제로 내쫓고,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다. 독립적인 보도채널을 무자격 기업에게 넘겼다. 수신료, 정부 광고 등 공적 재원을 도구화하여 언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

언론인에 대한 강제수사와 법적 괴롭힘도 강화했다.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언론사와 기자의 자택을 수차례나 압수수색했다. 권력 감시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형사고소를 당해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다.

비판언론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MBC는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보도했고, SBS는 김건희 ‘여사’ 호칭을 빼고 말했다고 징계를 받았다. 선거방송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표적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장이 가족, 지인에게 민원을 청구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모두가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다.

방심위는 법에도 없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 시스템’을 만들어 대통령 풍자 영상을 차단했다. 경찰은 이 영상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는 자는 형사적 처벌을 각오하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집회시위는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금지 장소가 아닌데도 집회 제한이나 금지통보가 내려진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집시법 시행령을 개악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대통령 집무실 근처 도로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넣어 시위를 통제한다.

노동자 집회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년간 평화롭게 진행해온 노숙문화제가 금지됐다. 경찰은 법원, 현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 집회와 문화제를 강제로 해산시킨다.

윤석열 정부는 전장연을 폭력단체로 낙인찍고, 탄압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며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장애인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탑승 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평화적인 침묵 선전전을 하는 참가자들을 끌어내고, 연대하는 시민을 연행하며, 기자와 영상 활동가의 취재를 방해했다.

정부의 적대적인 이념 정책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다시 불러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부활한 블랙리스트 정책은 “지원사업 통제를 통한 좌파 적출과 우파 진흥” 기초를 복원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사문화되고 있으며, 좌파로 낙인찍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배제·통제하기 위한 조사, 감사, 예산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접근의 권리도 퇴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유례없는 인재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마저 비공개했다. 정부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때마다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공공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발생한다. 정부의 비밀주의는 권력에 대한 대중의 감시를 방해하고, 사회적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결성하고, 대한민국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국제적인 진영대결과 ‘민주주의 위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나라의 대표와 관계자들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 세계 시민사회, 인권활동가들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의 이행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 비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1조넷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이 명하는 대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3월 18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